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4월 01일 (목)

제 254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 1. 대북압박 정책에 동원된 '인권'
- 2. '송두물 교수 재판, 국가보안법 폐악 드러내'
- 3. 총선 투표함에 국민발의·소환 요구 '선거무효' 논란
- 4. 이달의 인권 (2004년 3월)

대북압박 정책에 동원된 '인권'

북한인권법안, 미 하원 상정

인권을 정치적 수단으로 한 대북 압박이 미국 내에서 계속 시도되고 있다. 지난 3월 23일 미국의 짐 리치(공화 아이오와주) 하원 국제관계위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장은 '2004 북한인권법안'을 미 하원에 상정했다. 현재 상, 하 양원에는 지난 해 11월 상정된 북한자유법안(아래 자유법안)도 계류 중이다.<인권하루소식 3월 3일자 참조>

북한인권법안은 자유법안의 일부를 수정한 것으로, 법안의 목적에서 대량살상무기 문제의 해소가 빠진 점이 자유법안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와 관련, 북한자유법안 연구자인 유정애(미국 코넬대 개발사회학 박사과정, 현 이화여대 여성연구원) 씨는 "(의원들 간에) 자유법안에 기재돼 있던 북핵 문제 등 정치, 전략적 사안을 해결하는 방법론에 차이가 생겨, 먼저 인권, 난민 부분에 초점을 맞춘 법안을 제출한 것 같다"고 추정했다. 자유법안은 인권 문제를 대량살상무기 문제의 해소라는 정치, 군사적 전략과 연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북 체제 붕괴 겨냥한 불씨

그러나 북한인권법안은 자유법안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목적 중 하나로 민주정부에 의한 한반도의 통일을 언급하고 있어, 미국이 북 체제의 붕괴 및 남한에 의한 한반도 흡수 통일을 꾀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놓지 못하게 한다. 유정애 연구원은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한반도는 '휴전상태'와 더불어 또 하나의 매복선을 안고 사는 것이 되며, 이것은 미국의 도발 근거가 될 수도 있다"고 크게 우려했다.

미국의 대 이라크 정책을 살펴볼 때, 이러한 우려는 더욱 증폭된다. 럽스펠드 미국방 장관은 지난 3월 25일 ABC 방송 시사프로그램의 인터뷰에서 이라크 침략이 9.11 이전부터 계획된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은 미국의 상, 하 양원에서 통과됐던 이라크 정권교체법안(의 내용)과 밀접한 것이며, 미 행정부 정책의 일환이었다"고 답한 바 있다. 여기서 럽스펠드가 언급하고 있는 법안은 1998년의 이라크 해방법으로 짐작된다. 이라크 해방법은 미국의 대 이라크 정책을 "이라크에서 사담후세인 체제를 제거하고 민주정부를 창출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개괄하며, 이라크 반정부세력의 방송 송출과 군사 원조 및 인도적 원조 등에 예산을 배정했다.

남북화해와 교류에도 역행

대북 라디오 방송 시간의 연장과 라디오 수신기의 배포, 인도적 지원 및 비인도적 지원에 대한 여러 조건 요구, 탈북자들의 입국 허용 및 난민 지위 부여 등 자유법안에 이어 북한인권법안에도 다시 등장하는 내용이다. 미국에 의한 대북 라디오 방송은 물리적 충돌을 유발하는 등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는데다, 남북의 화해와 교류 협력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또한 인도적 원조는 식량권 상황에 대한 고려 외에 다른 조건이 있어선 안 된다. 증유제공이나 경수로 건설 등 6자회담의 의제인 비인도적 원조를 이산가족의 재결합 및 일본인 납치자 문제 등 전혀 관계없는 쟁점과 연계하는 것은 6자회담에 임하는 미국 정부의 성실성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의지를 의심케 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단,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는 미 대통령이 원조를 제공할 때 이러한 조건에 제약받지 않을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북한인권법안에서 달라진 부분이다.

북 인권 새 담론 형성 시급

인권운동사랑방, 좋은벗들, 참여연대, 통일연대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북한자유법안과 더불어 새로이 상정된 인권법안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하는 의견을 빠른 시일 안에 미 의회와 사회단체들에 보내기 위해 준비 중이다.
한편, 유정에 연구원은 "이후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북 인권에 대한 시민사회의 담론형성 및 적절한, 그리고 합당한 대응"이라며 "아니면 계속 이러한 법안들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고 언젠가는 통과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당부했다.

<기사 처음으로>

'송두을 교수 재판, 국가보안법 폐악 드러내'

사회 각계, 국가보안법 폐지에 목소리 모아져

송두을 교수에 대한 법원의 중형 선고에, 사회 각계에서 개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다산인권센터 등 14개 인권단체는 31일 성명을 통해 "학문의 자유영역에 속하는 저술활동만을 가지고 송 교수를 북한의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몰아매려는 재판부에 예처로움마저 느낀다"고 밝혔다. 더욱이 반성이 없어서 중형에 처한다는 재판부의 주장은 "전향서를 작성했다면 봐줄 것인데 그렇지 않아 패섬하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국가보안법이 "사법당국의 자의적 잣대로 판단할 수 있는 반인권 법률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도 "과거의 법으로 학문과 지식인을 재판하지 마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김일성 부자의 사상을 남한에 전파해 평화통일에 악영향을 끼쳤다는"과 "남북 통일학술대회 개최의 노력은 평화통일에 기여했다고 판단해 무죄로 판결한 것"은 이중적 잣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판부의 편협한 판결은 통일의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민족의 미래에 큰 장애물이 아닐 수 없다"며 악법 중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사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가보안법폐지를위한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등도 각각 성명을 통해 송 교수에게 7년의 중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송 교수 사건을 통해 다시금 국가보안법의 폐악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국가보안법과 인권·민주주의는 서로 양립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선고 직후 송 교수를 면회한 부인 정정희 씨는 "남편 역시 불충분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에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화 됐다는 이 사회에서 구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이 계속 존재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 씨는 이번 판결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옮겨 읽는 것이었다"며 "처음부터 짜여 있던 각본에 따라 조중동 등 수구 언론에서 미리 언론재판을 끝내고, 재판부는 검찰이나 국정원의 주장을 고스란히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정 씨는 "40년 가까이 민족문제를 안고 고뇌해왔던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 이렇게 감옥에 가둬둘 수 있느냐"며 "법원 앞에서 매일같이 시위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내기도 했다.

송두을무죄석방대책위를 비롯해 인권사회단체에서는 '토론회'와 '시민법정' 등을 개최하여 이후 1심 판결의 부당성을 국내에 알려 나가면서 국제사회에서도 송 교수의 무죄석방 탄원을 계속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기사 처음으로>

총선 투표함에 국민발의·소환 요구 '선거무효' 논란

국민발의·소환을 요구하는 용지를 4.15 총선 투표함에 넣는 운동에 대해 '선거무효' 논란이 제기되자 인권운동사랑방이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여부를 질의했다.

전국학생연대회의, 대항지구화행동, 인권운동사랑방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 쟁취를 위한 네트워크'는 '국민이 국회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국민발의·소환 권리를 국회, 정부에 분명히 전달하고자 이 운동과 함께 전국민 서명 및 캠페인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은 투표함에 다른 용지를 넣는 것이 선거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를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이 운동과 관련한 언론보도에서 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은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함에 다른 용지를 넣는

행위가 선거법 위반인지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질의서는 '투표함에 별도의 용지를 넣는 행위가 어떠한 법에 저촉이 되는지', '그러한 행위가 다른 투표용지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 무효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어, 조만간 이번 운동에 대한 선관위의 공식적인 입장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권운동사랑방은 "투표함에 의견을 담은 용지를 넣는 것은 국민발의권과 소환권을 주장하기 위함이지 선거자제를 무효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먼저 들은 다음 이 운동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유보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 쟁취를 위한 네트워크'도 이 문제에 관해 논의 중이다.

<기사 처음으로>

이달의 인권 (2004년 3월)

흐름과 쟁점

1. '직접민주주의' 지지개를 쫓다

국회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가결시켰다(3/12). 광화문에서 연일 탄핵가결반대 촛불 집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현재의 대의제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바로 탄핵사건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주권자가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국민발의제·국민소환제'의 도입이 제기되고, 네티즌들은 온라인에서 국민소환제 추진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전국학생연대회의, 대항지구화행동, 인권운동사랑방 등 7개 인권사회학생단체들은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 쟁취를 위한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서명과 캠페인에 돌입했다(3/13~31).

2. 개악 집시법, 폐지와 불복종 운동의 다른 처방이 없다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는 1일부터 발효된 개악 집시법에 저항하기 위해 '불복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3/4). 연석회의는 토론회에서 "현행 집시법은 불필요하다"며 집시법 폐지를 주장했다(3/10). 경찰청은 16일 이후 촛불 문화제가 집시법 위반이라며, 주최자를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3/17).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아래 범국민행동)은 촛불 문화제는 집시법 상 야간행사가 가능한 '문화행사'임을 주장하며 계속 진행했다(3/17~27). 연석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문화행사나 추모제가 야간에 열릴 수 있는 것처럼 야간의 정치적 집회도 질서유지인을 둔다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고 주장했다(3/19). 또 연석회의는 헌법재판소에 개정 집시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3/22). 검찰은 범국민행동 최열 씨 등에 대해 집시법 위반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3/26). 경찰은 야간에 진행된 고 최옥란 씨 추모제가 집시법 위반이라며 참가자 82명을 강제로 연행했다. 연행자 중 4명은 불구속, 15명은 즉결심판처분, 그 외는 훈방조치 됐다(3/26~27).

3. 표적연행, 강제추방, 그물망까지

법무부가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4차 합동단속을 시작했다(3/1).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16일째 단식 중이던 이주노동자 4명을 강제출국시켰다. 이에 명동성당 이주노동자 농성단은 야만적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처사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보호소 내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3/3). 인권단체이주노동자농성대책위원회는 안산·고양 등에서 이주노동자 64명을 조사한 결과 "이주노동자들이 강제단속·추방 정책 실시 이후 가혹한 인권부재의 상황과 내던져졌다"고 밝혔다(3/12). 명동성당 이주노동자 농성단은 지난 2월 15일 사멸타파씨의 표적연행을 계기로 시작된 단식을 정리했다(3/18). 서울출입국관리소가 그물총 4개를 구입하자 인권단체들이 '인간사냥'이라고 비판하며 그물총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3/30).

4. 국가보안법 여전히 건재...송두율 교수 중형 선고

서울지검 공안1부는 송두율 교수에게 '반국가단체 가입 및 중요 임무 종사' 등을 이유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3/9). 사회원로인사 162명 등은 검찰구형을 규탄하며 송 교수의 무죄석방을 촉구했다(3/9~1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송 교수가 노동당 후보위원으로 편향적 학술활동을 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인권사회단체들은 재판부의 중형 선고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3/30~31).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하루소식

2004년 04월 02일 (금)

제 254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샤말타파 씨 기습적 강제출국 당해
2. 박일수 열사 대책위 '탄압은 투쟁을 부른다'
3. <토론회 지상중계> 북한인권과 남한 인권운동의 역할

샤말타파 씨 기습적 강제출국 당해

노동운동 경력, 반체제 인사로 찍혀 네팔 귀국 시 신변 안전 우려

출입국관리소가 군사작전을 수행하듯 어둠을 틈타 비밀리에 이주노동자를 공항으로 이송하여 강제 출국시켰다.

여수 보호소(출입국 관리소)에 수용 중이던 샤말 타파 씨는 1일 새벽 인천공항으로 이송, 오전 9시 홍콩행 비행기를 통해 강제출국 당했다. 샤말 씨는 홍콩을 경유하여 고국인 네팔로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동성당 이주노동자 농성투쟁단(아래 농성단)은 아침 7시 30분 샤말 씨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급히 공항으로 향했으나, 손을 쓸 수 없었다. 샤말 씨와 가진 통화에 따르면 이번 강제출국은 본인에게 사전통보도 없이 비밀리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농성단 대표로 활동 중, 지난 2월 15일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에 의해 납치되다시피 표적 연행된 샤말 씨는 네팔이주노동자 연합 사무국장,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위원장 등의 활동을 통해 이주노동자 운동을 활발히 벌여왔다.

샤말 씨는 외국인 보호소 내 인권유린과 연행 당시의 인권침해 문제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내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윤철아 공보담당관은 "샤말 씨가 진정을 낸 1월부터 법무부의 강제퇴거 시도가 있어서 조사를 위해 '안된다'는 의견을 보냈었다"고 말했다. 윤 담당관은 "보통 법무부가 강제 출국 전에 인권위에 통보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통보도 없이 이루어졌다"고 말해 출입국관리소가 샤말 씨를 강제 출국시키기 위해 얼마나 무리수를 썼는지를 가늠케 했다.

한편, 샤말 씨의 고국인 네팔은 현재 내전 중이어서 귀국할 경우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 농성단 강현주 씨는 "네팔의 내전문제와 함께 샤말 씨는 한국에서의 노동운동 경력으로 인해 반체제 인사로 분류되어 처벌이 우려된다"며 인도적 고려가 전혀 없는 정부의 조치를 비난했다. 농성단은 2일 명동성당에서 샤말 타파 강제출국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출입국관리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최근 출입국관리소가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을 위해 그물총을 도입한 것과 관련해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또다시 비인간적인 강제출국이 발생하면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 대응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사 처음으로>

박일수 열사 대책위 "탄압은 투쟁을 부른다"

영안실에서 노동자 강제연행, 공개 하청노조원 '해고'

경찰이 이른 새벽 영안실에 난입해 농성 중이던 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노동자들을 강제로 연행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달 28일 새벽 5시경 사복을 입은 경찰이 박일수 열사의 빈소인 영안실에 난입해 '박일수 열사 울산대책위(아래 대책위)' 이현구 위원장과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조 조성용 위원장, 감주의 조합원을 강제로 연행했다. 경찰의 갑작스런 난입으로 이들은 옷도 제대로 갖추어 입지 못한 채 연행됐다. 30일 이 씨와 조 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2일 울산 동부경찰서에서 울산구치소로 이송될 예정이다. 이들은 노동자들의 출퇴근을 방해했다는 '업무방해', 정몽준 씨와 현대중공업에 대한 '명예훼손',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김 씨는 불구속으로 석방됐다.

한편, 분신 이후 이어지는 하청노조 조합원들의 공개활동 선언에 회사 측은 해고로 맞서고 있다. 2월 23일 먼저 공개 활동을 선언했던 진용기 씨와 조광한 씨는 현재 '실질적 해고' 상태이다. 진 씨는 원청기업인 현중으로부터 '현장에 대한 출입 제한' 조치를 받은 후 하청기업으로부터 계약만료를 통보받았고, 조 씨는 산재신청 중이다. 대책위 이동의 언론담당은 "조 씨는 그동안 근골격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노조원 공개활동 선언 후 회사로부터 '산재를 신청하라'는 압력을 받았다"며 "진 씨와 조 씨 모두 실질적으로 해고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 12일 김태형 씨와 박규영 씨가 노조원으로서 공개 활동을 선언했으나, 일주일 후 회사 측이 '하청 물량이 줄었다'며 이들에 대해 휴업을 통보해 '강제 휴직'되었다.

이에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 오민규 사무국장은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라는 기본적인 요구에도 탄압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노하며, "무리한 탄압으로 비정규직 투쟁의 확산을 막으려는 의도인 듯 하지만 오히려 탄압이 투쟁을 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3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새벽에 군사작전 하듯 노동자들은 연행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라고 주장하며 "이것이 '새로운 노사관계 구축'과 '노사화합'을 설교하던 정부 노동정책의 실상"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28일부터 울산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진행된 대책위의 노숙농성은 현재도 진행중이다. 그리고 노숙농성 중인 하청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폭력적인 탄압 역시 여전히 '진행중'이다.

<기사 처음으로>

<토론회 지상중계> 북한인권과 남한 인권운동의 역할

북한인권, 한반도 인권담론으로

최근 유엔 인권위에 북한인권결의안이 제기되고, 미국 상하원에서 북한인권법안이 상정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 인권운동 진영은 북한인권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관한 논의가 촉발되고 있다. 지난 3월 30일 인권운동연구소는 3월 월례토론회를 통해 '북한인권과 남한 인권운동의 역할' 이란 주제로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활발한 논의를 이끌었다.

북한인권 '체제문제'로 환원하지 말아야

인권운동연구소 이창조 연구원은 "북한 인권문제의 다양성을 '체제의 문제'로 환원해 버리는 시각은 북한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한인권문제가 "어떤 것은 체제(북한식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문제라 볼 수 있는 반면, 어떤 것은 국가권력의 일반적 속성이나 사회적 관용의 수준, 제3국과의 관계와 국제적 환경 등에서 문제의 근원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파스르마나 이성훈 사무국장도 "북한 내 가부장적 문제 등 체제문제로 환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접근법이 필요하며 이런 접근이 북한인권을 정치화시키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식량권, 평화 정착 최우선

그렇다면 무엇부터 어떻게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창조 연구원은 "북한인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식량부족과 그에 따른 생존권 위협으로부터 해소"라고 말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북한에 존재하는 식량지원 대상이 650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했듯이 북한의 식량권은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어 "한반도의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쟁 상태 혹은 준전쟁 상태가 북한인민 전체를 위협하는 상황은 '인권보장'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 국제적인 평화조성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실질적 개입과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창조 연구원은 또한 재중 탈북자의 경우 '이주노동자 인권보장'의 관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풀자고 제안했다. 이어 '정치범수용소' 등 구금시설의 인권문제는 1차적으로 북한당국이 외부의 접근과 조사를 수용해서 문제여부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의 구금시설을 문제삼는 나라들이 술선해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하고 자국의 구금시설에 대한 조사의 길을 열어두지 않는 한 북한의 구금시설에 대한 문제제기는 정치적 공세라는 혐의를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구금시설의 인권문제가 북한만의 문제가 아닌 상황에서 문제제기의 공정성과 균형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북한인권결의안 대한 한국정부 입장에 찬반 엇갈려

60차 유엔 인권위가 지난해에 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에서 참석자들은 이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했다. 이성훈 씨는 올해 EU에서 준비하고 있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작년에 비해 공세적이고 강한 내용을 담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은 이란이나 이라크에서와 같이 북한인권카드를 갖고 대응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창조 연구원은 "나라별 결의안과 같은 일괄적 접근방식보다는 식량, 고문 등 사안별·주제별 포괄적 접근"을 제안했다.

또한 북한인권결의안과 관련해 한국정부가 취할 수 있는 입장에 대해서는 '반대에서 찬성까지'까지 다양한 의견이 분포하고 있었다. 이창조 연구원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남한정부는 '당사자' 관점을 갖고 출발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남한정부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입장에 대해 이창조 연구원은 "'인권을 수단화하는 정치공세'에 반대하면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호소하는 한편, 북한 당국과의 '인권대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한다"고 피력하는 가운데 결의안을 '반대'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반면, 좋은 벗들 이승용 평화인권부장은 "한국정부가 국제사회에서 한반도를 대변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국제사회는 한국정부가 북한까지 끌어안고 가기를 기대하는데 한국정부가 반대 내지 기권 또는 불참한다면 북한을 국제사회의 미아로 내던져버리는 꼴이 된다"며 한국정부가 결의안을 찬성하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반도 인권보장과 평화를 위해 나서야

그 동안 북한인권이 정치·이념적 토대 아래에서 다뤄져왔다면 이제는 '인권의 감수성'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과 남북 공동의 인권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여성주의 저널 일다 조이여울 편집장은 "북한과는 지역적으로도 가깝고 말도 통하고, 역사와 미래를 공유해야 하는 운명이라는 점에서 남한 인권운동가들이 북한 사람들의 생활과 인권에 당연히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조이여울 씨는 국내 거주하는 탈북자들과 이야기를 통해 북한의 실상에 대해 접근해보려는 자세가 필요하고, 북한에 들어간 한국기업의 인권침해를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활동가는 "북한인권만을 대상화하지 말고 이것을 한반도라는 틀에서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론체계를 만들고, 남북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인권문제에 대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50년 넘는 분단체제 속에서 양쪽의 권력이 서로를 핑계 삼으며 억압적인 법과 관행들을 만들고 존속시켜 왔음을 직시하여 남북한 내 존재하는 반인권적 인 법들과 관행을 해결하도록 남북한 정부에게 촉구하자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인권운동 진영이 한반도 평화와 인권실현을 위해 실천이 필요하다 는 공감속에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는 자리였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4월 03일 (토)

제 254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절망을 넘어선, 평등을 향한 연대
2. 장애인 차별하는 '고속철도'
3. [반차별 포럼] 첫 번째:교육과 차별 '차별적 교육, 교육적 차별 안돼'
4. [근조] '마지막 빨치산' 정순덕 선생님이 운명하였습니다.

절망을 넘어선, 평등을 향한 연대

2002년 3월 가난한 장애인 여성 최옥란 씨가 세상을 떠났다. 그녀가 죽기 몇달 전 농성을 하며 남겼던 말, "더 이상 수급자들이 자살하거나 저같이 자살을 생각하지 않도록 바뀌었으면 합니다"는 말은 유언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그 후에도 세상은 바뀌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을 절망하며 빛에 허덕이다 약을 먹었고, 고층에서 뛰어내렸고, 목을 뺐다. 그리고 바로 최근인 3월 26일, 또 한명이 자신의 목에 줄을 뺐다. 평택에 사는 열다섯 살 여중생 가장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노숙생활을 전전하다 객사했고, 연탄배달, 식당종업원 등으로 생계를 잇던 어머니는 뇌종양으로 쓰러졌다. 정부에서 나오는 생계비 60만원은 어머니의 치료비를 대기에도 부족했고, 빛은 자꾸 불어났다고 한다. "나는 우습게도 소녀가장이었고, 아버지도 안 계시는 불쌍한 아이였다. ... 이런 나에게 ... 미래가 있을까?" 일본어, 컴퓨터, 음악 등 하고 싶은 게 많았지만, 현실은 그녀에게 꿈을 허용하지 않았다. 입학금 때문에 당장 고등학교 진학조차 불투명했다고 한다. "차라리 거리의 풀 한 포기 태어났으면 좋으련만 ... 차라리 바람에 휘날리는 모래 한 줌으로 태어났으면 좋으련만..."

그녀처럼 '풀 한 포기', '모래 한 줌'이길 희망하며 또 누군가가 죽음을 준비하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 "뭘든 해서, 이 양다물고 살아야지. 죽긴 왜 죽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 말로는 또 있을지 모를 가난한 이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

어떤 고급아파트의 청약 기간 이들 동안 우리나라 사회복지 예산 70%에 달하는 7조가 물리고, 부자 5%가 우리나라 부동산의 50%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또 다른 세상이다. 어떤 사람은 일하지 않고도 수십억의 유산을 남기는데, 고된 일을 하면서도 빚을 지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게으르다 말할 수 있는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걱정엔 한숨이 늘고, 속이 풀아 끝내는 유언 한 장 남기고 가는 사람들에게 나약하다 말할 수 있는가.

경쟁과 효율만을 추구하며 불안정한 노동과 삶으로 사람들을 몰아가는 이 사회가 문제다. 돈이 없어 배굶는 일, 학교 못 가는 일, 병원 못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집세가 없어 거리를 배회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가난과 불평등이 국가의 책임이고, 사회의 책임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에 맞선 사람들의 연대가 없다면, 부의 양극화를 조장하는 이 사회가 스스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개인과 가족에게만 강요되는 절망의 벽을 넘고, 인간다운 생존, 평등을 향한 연대로 나아가야 한다.

<기사 처음으로>

장애인 차별하는 '고속철도'

935좌석 중 휠체어사용석은 단 2개 ... 편의시설도 미비

'꿈의 교통수단'이라 자랑하는 고속철도가 장애인들에게는 현실이 아닌 '꿈'에 불과한 무용지물로 드러났다. 고속철도가 개통한 지난 1일 휠체어 장애인 20명이 고속철도에 탑승하려 했지만, 휠체어 사용석이 2개 밖에 없었으며 철도청은 2명을 제외한 18명의 탑승을 막았다. 고속철도 1편당(전체 935좌석) 휠체어사용석은 2개 밖에 없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아래 420기획단)은 2일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이란 이유로 승차를 거부한 것에 대해 철도청장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장애인에게 무용지물인 고속철도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라"고 요구했다. 좌석의 부족뿐만 아니라 휠체어를 고정시키는 장치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휠체어사용석은 특실인 2호차 맨 마지막 줄의 의자 2개를 빼내고 빈 공간에 만들어질 뿐이다. 또 장애인 화장실은 수동휠체어가 회전할 수 없을 정도로 좁아 출입문도 닫을 수 없으며, 전동 휠체어는 아예 들어갈 수조차 없다. 따라서 휠체어 장애인 혼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장애인 20명이 또다시 승차를 시도했지만, 철도청이 동원한 철도 공안과 경찰이 개찰구를 가로막아 장애인들은 승차할 수 없었고, 끝내는 승차권을 반환해야 했다. 장애인들의 탑승시도와 이를 막는 철도청의 태도를 지켜보던 시민 조인형 씨는 "애초에 장애인들도 충분히 탈 수 있게 만들어야 했다. 장애인은 못타라는 법이 있느냐?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부족한 좌석에 대해 강길현 고속철도계획과장은 "애초(휠체어사용석) 설계가 2석 이었고, 프랑스와 계약당시 우리가 설계를 바꿀 수 없게 돼 있었다"며 "합리적으로, 지금 당장 어떻게 고칠 수가 있느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경석 420기획단 공동대표는 "프랑스와 계약은 중요하고 장애인 인권을 아무 것도 아니냐?"며 "고속철도를 준비한 것이 10년이 넘었다. 처음부터 고속철도 만들 때 장애인의 요구를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를 말해준다. 그 합리성은 귀 막고 있다"고 '배째라'식 합리성"이라고 받아쳤다.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고속철도는 장애인들이 일상적으로 느끼는 수많은 차별에 또 하나의 차별을 더했다. 420기획단 윤두선 공동대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란 것이 사회 곳곳에 너무 많기 때문에 당연한 것, 운명이라고 생각할 지경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또 차별을 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 처음으로>

[반차별 포럼] 첫 번째: 교육과 차별 "차별적 교육, 교육적 차별 안돼"

'차별없는 세상'을 꿈꾸다

'차별'이란 무엇일까? 미국의 한 공항에 함께 들어가던 일본인은 유유히 걸어 들어가는데 한국인은 지문날인을 하기 위해 줄서서 기다려야 한다면, 이것은 차별일까? 요즘 강남의 초등학교에선 23만원짜리 '명품' 지우개가 '유행'이라고 하던데, 결식아동들에게 이것은 차별일까?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연구모임의 조순경 씨는 "초기 단계에서 차별은 직접적이고 가시적이고 의도적으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불리하게 대우(구별, 배제, 제한 등)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제한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었지만, 오늘날... 차별은 이러한 △직접차별은 물론이고 △간접차별 △폭력(harassment)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 판단을 위한 지침』, 2002) 즉,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퇴학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지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동일한 시험시간을 제공하는 경우 역시 '간접차별'이 된다. 또한 회사나 학교에서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성희롱적 발언을 한 경우도 '폭력'으로서 '차별행위'가 된다.

차별에 눈을 뜨자

'차별'은 실제로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고, 인권운동은 기본적으로 모든 차별에 반대하는 운동이다. 하지만 현재 인권운동을 평가함에 있어, 현실에 존재하는 복잡한 차별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범주의 제한으로 특정한 차별의 문제가 소외될 수 있다는 인식 속에 '전국인권활동가대회 준비모임'에서는 '반차별 포럼'을 준비하게 되었다. 준비모임은 반차별 포럼을 통해 '인권운동에서 소외되는 문제를 일상적으로 모여 끊임없이 고민하며 공동행동을 준비할 것'이라고 목적을 밝히고 있다. 반차별 포럼은 △교육과 차별을 시작으로 △형사사법 절차와 차별 △가족과 차별 △노동과 차별 △국가주주의 차별을 주제로 다룰 예정이다.

첫 번째 '교육과 차별' 포럼에서는 교육 기회의 접근권과 교육 과정 내에서의 차별 등의 문제가 교육현장과 교과서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함께 토론했다. 특히 이번 포럼은 기존의 토론회와는 다른 방식이 시도돼 눈길을 끌었다. 참가자들이 '빈곤가정·이주노동자 자녀·성소수자·장애인과 교육'이라는 각각의 관심 분야에 따라 모둠별로 논의하고 결과를 게임을 통해 소통한 것. 한 모둠에서는 '맞아 맞아 으뜸 5'를 선정하기도 했다.

차별, 아.. 다양하기도 하여라

성소수자와 교육 모둠에서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인정해, 하지만 내 아이는 안돼" "호모세끼" 등을 유행어로 선정 발표해 성소수자의 존재를 아예 무시하거나 성소수자에 대한 비하, 성소수자의 존재와 권리를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자신과 관계되는 성소수자는 인정하지 않는 현실을 꼬집었다. 빈곤가정의 아이들이 교육 과정에서 받는 차별을 고민한 모둠에서는 "사교육비가 너무 비싸다" "차별을 교육한다" 등의 차별 유형을 발표했다. 가계에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사교육비의 문제, 교과 내용이나 교사

의 태도에서 성공과 출세, 경쟁 등의 가치만을 교육하는 교육 현장에 대한 문제 등을 통해 재산과 교육수준에 따른 빈부의 세습화 경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장애인과 함께 장애인과 교육 차별의 문제에 대해 논의한 모둠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부족" "언어폭력" "교사양성과정의 문제" 등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권과 직결되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장애인을 빗댄 말인 "애자"라는 말로 친구들을 놀리며, 교사양성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전혀 접하지 못하는 현실이 발표되었을 때에는 분위기가 숙연해지기도 했다. 또한 사회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이 늘어가는 가운데 이주노동자 자녀와 교육 차별의 문제도 논의되었다. '가난한 나라에서 온 아이'라며 "거지 새끼"라고 놀리는 것이나 "언어 적응 프로그램의 부족" "이주노동자 단속에 대한 불안감" 등이 발표되었다. 아이들의 언어를 통해 우리 사회에도 인종차별주의가 뿌리깊게 존재함이 드러났고 부모에 대한 단속의 불안감이 아이들에게까지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이야기하면서 참가자들은 모두 가슴 아파했다.

이후 준비모임에서 준비한 각 분야별 연구 발제를 진행하고 국제인권기준에서의 '차별'을 검토하고 다함께 토론하면서 어떠한 차별이든지 인권의 이름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은 없으며 인권운동은 그러한 차별들을 간과하지 않아야 함을 참가한 모든 인권 활동가들과 공감할 수 있는 자리였다.

<기사 처음으로>

【근조】 '마지막 빨치산' 정순덕 선생님이 운명 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 정순덕(1933년 경남 산청 출생)님은 1951년 2월, 유격대원이던 남편 성석조님을 찾아 지리산에 입산, 빨치산으로 활동하던 중 1963년 '마지막 빨치산'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1985년 가석방으로 출소할 때까지 복역하셨습니다. '2000년 비전향 장기수 송환'에서 제외되어 그 동안 2차 송환을 요구해왔었습니다. 장례식 - 4월 3일(토)12시, 파주 보광사(031-948-7701) 민가협(02-763-2606)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4월 07일 (수)

제 254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구치소 수수방관에 수용자 '피의 절규'
2. 4월 반딧불 '칠레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3.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③
4. <이것이 민주주의다!- 국민발의권 국민소환권 열린 토론회>

구치소 수수방관에 수용자 '피의 절규'

영등포구치소 수용자, 단식에 이어 동맥 끊어

구치소 내 교도관의 '상습적 폭행과 가혹행위'에 대한 해결요구에 구치소가 수수방관하자, 수용자가 자신의 동맥을 끊었다. 영등포구치소에서 15일째 단식 중이던 정모(전국철거민연합 회원)씨는 지난 3일, 수용자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와 관련해 진상규명과 폭행 교도관 처벌을 주장하며 자신의 손목 동맥을 잘랐다. 병원으로 이송된 후 정씨는 구치소장의 책임 있는 약속을 요구하며 수술을 거부하다, 구치소장이 전화통화를 통해 제조사 및 대책 마련을 구두로 약속한 후 수술을 받았다. 현재 구로성심병원에 입원중인 정씨는 생명이 위험한 상태는 아니지만, 여전히 단식을 풀지 않고 있다.

영등포 구치소에서는 지난 2월과 3월에 교도관의 가혹행위를 주장하며 안 모씨와 강 모씨 등이 단식을 벌였고, 검찰고소로 조사가 진행중인 상태이다. 더욱이 이와 관련해 진행된 변호사 면담에서 다른 수용자들도 교도관의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주장해, 구치소 내 가혹행위에 대한 전면조사가 계속 요구되어 왔었다.<관련기사 2004년 3월26일자 참조>

조영호 영등포 구치소장은 3일 저녁 민주노동법률원 권두섭 변호사와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아래 전해투) 황창훈 위원장 등을 구치소에서 만나 폭행과 가혹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약속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최준석 조사관은 6일 구치소장이 보낸 공문 접수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이 조사중인 사안에 대해서 조사한 사례가 없어서 전면적인 재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 후 결정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등포구치소 김중규 서무과장은 "구치소는 인권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겠다는 것이 공식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치소 내 폭행 의혹과 관련해 수용자들이 단식에 이어, 동맥까지 끊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데도 법무부 역시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 보안 2과 이영환 주임은 "구치소 측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할 일이고, 검찰 수사중이라 수사 결과를 보고 그것에 따라 판단할 일이다"라고 대답했다.

전해투와 인권단체는 8일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영등포구치소 내 교도관의 폭행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계획중이다.

<기사 처음으로>

4월 반딧불 "칠레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칠레전투 3: 민중의 힘> 상영

고베 풀린 정치권의 술수가 평행하는 가운데, 끝간데 없는 대의 민주주의 제도의 횡포를 목도한 분노의 씨앗들은 지난 몇 주간, 광화문의 촛불이 되어 하나둘씩 불을 밝혔다. 분출할 길 없던 채로 쌓이고 쌓인 민중들의 분노가 자칫 특정 보수 정당의 이익으로 안락되지는 않을까, 위로부터의 세계화를 요구하는 체제의 질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현정권에 대한 지지로 수렴되지는 않을까 적잖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간 주목받지 못하고, 획득하지 못했던 민중의 권리를 되새김질할 수 있는 역동적인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4월 인권영화 정기 상영회 반딧불에서는 잃어버린 민중의 권리를 상기시키는 영화 <칠레전투3: 민중의 힘>을 상영한다. 이는 20여 년 전 선거를 통해 이룩한 최초의 사회주의 정권이라고 평가받는 칠레 아옌데 정권 아래, 자본가와 미국을 위시한 기득권층의 끊임없는 체제 전복의 위협에 맞선 민중들의 기운을 감지할 수 있는 영화이다. 1973년 아옌데 정권의 붕괴를 목표로 미국 정부와 칠레 자본가들의 공생 관계가 정점에 달한 시기, '민중 상점'과 '산업 벨트'의 존재로 상징되는 조직화 된 민중들의 힘은 당시의 좌익 정당들에게도 놀라운 것이었다. 보수 세력들의 가공할 만한 경제적, 정치적인 공세 속에서 '사회주의로 가는 평화의 길'이 한계에 봉착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고개를 들 무렵, 민중들은 정치의 장에서 사회주의로의 여정을 피하려는 국가의 통제마저 넘어서 자발적으로 일어선다. 흑백 필름 안에 새겨진 총탄했던 민중들의 열정과 실천들을 마주하면, '민중 권력'이 그저 머나먼 유토피아에서만 회자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된다.

사회 변혁과 정치적 해방의 도구로써 영화를 적극 사고한, 라틴 아메리카 제3영화 운동의 자양분을 흡수하여 탄생한 <칠레전투>는 잊혀진 듯한 칠레의 어체에 관한 기록 일 뿐만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오늘의 싸움을 견인한다.

△때 : 4월 10일(토) 오후 8시
 △곳 :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TTL 광장
 △문의 : 02-741-2407

<기사 처음으로>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③

국가안보, 한반도 분단 상황의 특수성... 변명은 이제 그만

유엔 인권위원회(아래 유엔 인권위)가 지난 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제 항목 10번), 시민·정치적 권리(의제항목 11번)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4주째 일정에 접어들면서 각 결의안 초안의 내용을 마무리 짓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유엔 인권위 회기에 참가하고 있는 한국의 민간단체들 역시 국내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여론을 환기시키고 정부의 조속한 제도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송두율 교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등 연대회의 구두발언에 나서

2년마다 한번씩 채택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결의안과 관련하여 지난 2002년에 이어 두 번째로 유엔 인권위에 참가하고 있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 참가단은 지난 2일 민간단체 구두발언을 통해 송두율 교수 사건을 비롯한 국가보안법 적용의 실태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 집시법 개악 등을 언급하며, 이른바 "국가안보" 및 "한반도 분단 상황의 특수성"을 이유로 표현의 자유 및 사상, 양심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신랄히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또한 유엔 인권위를 비롯한 유엔의 각종 인권관련 기구들이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전면 재검토할 것을 권고해 온 점을 강조하면서 유엔 인권위 위원국이며 주요 국제인권규약 가입국인 한국정부가 국제인권기준을 국내적으로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병역거부권, 실태 수집·분석부터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국제인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파스 로마나(Pax Romana), 전쟁저항자인터네셔널(WRI) 등은 지난 5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에 관한 공개간담회를 열어, 한국, 이스라엘 등의 병역거부자 인권문제를 조명하고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역할, 민간단체의 활동 전략 등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의 데이빗 마살 씨는 2002년 채택된 결의안에 따라 지난 2년 동안 병역거부권 인정 및 대체복무제와 관련한 모범 사례(best practice)를 제출해 줄 것을 각국 정부에 요청하였으나 그 응답이 매우 적어 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이 모범 사례만을 수집할 것이 아니라 병역거부권과 관련한 각국의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수집, 분석하여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내는 작업에 착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간담회에 참석한 레이첼 브렛 씨는 병역거부권의 실제 국내 이행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몇 년째 "모범사례 찾기"에만 머물고 있는 유엔인권위의 논의 수준에 관해 각 정부의 의지 결여,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역할의 한계 등을 꼬집었다.

북한인권결의안, 더욱 강경한 내용으로 채택될 듯

지난해 제59차 회기 이후 국내외 안팎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북한인권결의안이 이번 회기에서는 더욱 강경한 내용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여 관련국들의 정치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번 결의안 초안에서는 지난해의 결의안에 더하여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특별보고관(Country-specific Rapporteur) 임명이 거론되고 있으며 중국으로부터 강제송환된 탈북 임신부들에 대한 강제낙태 및 혼혈 영아 살해, 강제노

동문제, 여성 인식매매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북한의 식량권 문제에 주목하며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균형 있는 접근방법을 통해 북한과의 건설적이며 실질적인 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국내외 민간단체들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을 주도하고 있는 유럽연합(EU) 측은 결의안의 내용에 대해 상당한 자신감과 결연함마저 보이고 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오는 15일 표결을 앞두고 있다.

한편, 지난 2일 국제인권연맹(FIDH)과 파스로마나(Pax Romana)가 공동주관한 북한인권문제 간담회에 참석한 식량권 특별보고관 장 지글러(Jean Zigler) 씨는 식량난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배의 투명성 문제를 직접 방문, 확인하기 위해 북한에 여러차례 입국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북한의 응답이 없는 상태이며 올해에도 북한 방문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2차 정보를 통해서라도 북한의 식량권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을 밝혔다. [제네바 강여경(좋은벗들), 김기연(민변), 정용욱(평화인권연대)]

<기사 처음으로>

<이것이 민주주의다- 국민발의권 국민소환권 열린 토론회>

1부 패넬토론

- 패넬1: 국민발의권 국민소환권에 대한 소개와 법률적 이론적 검토(인하대 법대 이경주 교수)
- 패넬2: 사례를 통해 바라보는 국민발의권과 국민소환권 (인권운동사랑방 배경내 상임활동가)
- 패넬3: 부안에서의 민주주의 실험 (부안 주민대책위 조태경 연대사업국장)

2부 자유토론

- △때 : 4월 7일(수) 오후 6시 30분
- △장소 : 고려대학교 정경관 506호
- △주최 : 국민발의권 국민소환권 쟁취를 위한 네트워크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4월 08일 (목)

제 254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금기'를 깨는 '올림'으로
2. ICC 이행입법, 본래 취지 살려야
3. 송두율 교수 사건, 국가보안법 헌법 소원 청구
4. 4월 반딧불 장소 변경

'금기'를 깨는 '올림'으로

'공무원 노조, 정치적 의사표현 보장돼야'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공무원노조)이 민노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 6일 검찰이 김정수 부위원장 등 9명을 구속한 가운데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3월 23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채택된 특별결의문을 통해 더 이상 기성 정치권에는 희망이 없다며 "민주노동당을 지지한다"고 정치적 의사표현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또한 "공무원노조는 업무상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나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사상과 신념의 자유까지 부정 당하는 '정치적 중립'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온몸으로 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의 정치적 중립과 신념의 자유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하위직 공무원은 업무의 성격상 대민 서비스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의사표현이 고위직 공무원과 달리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 인천 남동부 지부 심길웅 활동가는 "최근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과거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집권당의 요구를 반영하여 권력의 나팔수 역할을 수행했던 반성에서 비롯되었다"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에 공무원이라고 예외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공무원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지난 2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활동보장 정책토론회'에서 건국대 법학과 이계수 교수는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을 규정한 선거법 9조는 공무원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또는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선거과정에 명시·묵시적으로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포괄적인 의무를 규정한 것이지, 공무원 혹은 공무원노조가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에 있어서까지 중립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ILO규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기준은 이미 1970년대에 공무원 노조의 정치활동을 기본적인 인권으로 규정한 바 있다. ILO 규약 중 1978년에 채택된 '공공부문에서의 단결권 보호 및 고용조건 결정절차에 관한 151호 조약'은 "공무원은 다른 노동자와 동일하게 결사의 자유를 정상적으로 행사하는데 필수적인 시민·정치적 권리를 가지며, 오로지 그 직무의 성격과 지위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로 인해서만 구속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김명연 씨는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는 다른 노동자와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하고 시민·정치적 권리 역시 공무원의 직무 중립성과 모순되지 않는 형태로 보장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권리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기본적 권리이며 제한을 위해서는 그에 상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의 지위, 직무의 공공성, 행정의 중립성'이라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기준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할 때에는 명확한 요건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가장 덜 침해적인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최소침해의 원칙' 등이 분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3월 20~21일 이틀동안 전국대의원 500명과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설문조사에서 대의원의 경우 '공무원의 정치자유 보장 허용'에 대해 85.9%, 시민의 경우 44.5%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대의원의 경우 정당명부투표에는 76.5%가 민노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노조가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민노당을 지지하고 나선 것은 노동자로서 선거라는 정치적 공간을 통해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드러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공무

원'에게는 노동조합 활동도 정치적 의사표현도 '금기사항'으로 간주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최근 공무원 노조의 목소리는 금기를 깨는 울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 처음으로>

ICC 이행입법, 본래 취지 살려야

인권단체, '반인권 국가범죄' 및 '소급 적용' 주장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규정' 비준에 따른 정부의 이행입법(안)이 환영과 아쉬움을 동시에 받고 있다.

지난 2일 법무부가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안)을 입법예고하자, 반인도적국가범죄공소시효배제운동사회단체협의회(아래 공소시효배제협의체)는 7일 성명을 통해 "법무부가 늦게나마 ICC이행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 범죄'가 끊이지 않는 한국에서 로마규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대상범죄로 포함하고 △반인권적,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민사상의 소멸 시효를 규정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무부의 입법(안)은 지난 2002년 11월 국회에서 비준한 'ICC 로마규정'의 국내 이행을 위한 것이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살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개인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설 국제법원으로, '반인도적 범죄' 규정은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으로 △살인 △노예화 △고문 △성범죄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이러한 반인도적 범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공권력에 의한 반인권 범죄'로 과거에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어 왔고 이러한 국가범죄를 처벌하거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즉, ICC이행입법이 제정되어도 인혁당 사건이나 기타 의문사 사건과 같이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처벌하고 이러한 범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공소시효배제협의체는 "법무부가 ICC이행입법을 추진하면서 로마규정에 규정된 대상 범죄를 단순 도입하고 처벌하겠다는 발상에서 벗어나 반인권 범죄 근절에 대한 의지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차지훈 변호사는 "법무부 안이 ICC로마규정의 이행입법으로서 비교적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의 ICC이행입법은 "국내적으로는 반인도적 범죄로 인권과 생명이 유린된 역사를 지닌 우리에게 인권을 보호를 위한 제도적 틀이 하나 완성된 것이고, 국제적으로는 동아시아 국가를 비롯해서 로마규정에 대한 관심과 비준 및 이행입법에 촉진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의를 부여했다. 그러나 차 변호사는 "인권단체에서 주장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문제와 '과거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소급효' 등의 문제에 대한 언급과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입법예고 된 점이 유감"이라며, "이행입법이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논의와 관심이 재고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 처음으로>

송두율 교수 사건, 국가보안법 헌법 소원 청구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 조항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7일, 송두율 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송 교수 1심 판결이 '시대착오적 악법의 폐해'라 규탄하며, 국가보안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 교수는 지난 1심 판결에서 '북한 편향적인 학술활동'을 근거로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 단체의 지도적 임무 수행)으로 7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반국가단체의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를 사형 혹은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국가보안법 3조1항2호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의 취지를 밝혔다.

송 교수 변호인단 송호창 변호사는 "이 조항은 '간부'와 '반국가단체', '기타 지도적 임무'의 구성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송 변호사는 "이 조항이 재판에 적용되면 자의적인 법 집행이 이루어져 과도하거나 차별적인 처벌을 낼 수 있고, 북한의 수십만 주민도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헌법상의 과잉금지 및 평등의 원칙, 평화통일의 원칙에 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김세균 상임대표는 "이번 판결은 '혐의만 있으면 유죄로 인정해 온' 국보법의 고질적인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 밝혔다. 송 교수 부인 정정희 씨를 포함하여 기자회견에 모인 사람들은 "이제부터 폐지운동이 새롭게 시작된 것이라고 본다"며 "올해 안에 국가보안법을 해결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대책위는 국보법 6조 '잠입·탈출'과 8조 '회합·통신'에 대해서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할 계획이라 밝혔다. 대책위는 이후 송교수 사건에 대해 토론하는 공청회, 송교수 사건을 분석하는 책 발간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기사 처음으로>

4월 반딧불 장소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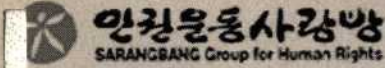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관 제1강의실

(지하철4호선 혜화역, 서울대 연건캠퍼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화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4월 09일 (금)

제 254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보기

하루소식 주제별 보기

안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 1. 법무부장관 진상조사 약속
- 2. "청소년의 인권을 먼저 생각하라"
- 3. 대의제가 민주주의의 전부라는 환상을 버려!
- 4. 클릭! 인권정보자료 - 군 영장제도를 흔들자!

법무부장관 진상조사 약속

영등포구치소 가혹행위 의혹 등 교정행정 전반 조사키로

교도관의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수용자의 호소를 외면해온 법무부가 마침내 진상조사를 약속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관련기사 2004년 4월 7일자 참조>

8일 천주교인권위원회, 전국해고자복지투쟁위원회 등은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영등포구치소에서 벌어진 가혹행위 의혹에 관해 사과와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약속 받았다. 강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와 함께 "감사실 중심으로 대책반을 만들어서 사건을 처음부터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외부에서 두분 정도 참여해서 공동 조사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또한 "조사결과에 따라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영등포를 사례로 삼아 교정행정전체에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사를 하겠다"고 밝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정행정 전체를 살피고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결국 인권·노동단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재발방지대책마련 요구를 수용한 셈이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활동가는 "법무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가겠다는 해결의지를 확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도 "앞으로 조사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감사관, 교정국장, 정책보좌관 등 법무부 관계자 9명과 인권단체가 추천하는 외부인사 2명 등 총 11명으로 영등포구치소 특별감사반을 편성하여 이번 사건의 경위 및 수습지연의 원인을 밝히고 그밖에 수용자 처우 등과 관련한 제도적 원인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교도관의 위법행위 여부, 계구 사용의 적법성 및 적정성 여부, 집필불허 등 수용자 처우와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들은 강 장관과 면담을 끝내고 영등포구치소 단식자들과 접견을 통해 면담 내용을 전달한 후 구치소장을 만났다. 김덕진 활동가는 조영호 구치소장이 구치소 내 공개방송을 통해 수용자들에게 폭행 의혹에 눈감아 왔던 사실을 사과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전국해고자복지투쟁위원회등은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영등포구치소의 가혹행위 은폐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영등포구치소 내 인권유린의 진상규명 및 책임자 문책, 가혹행위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했다.

<기사 처음으로>

"청소년의 인권을 먼저 생각하라"

전교조, 강제보충·0교시 거부 선언 ... 인권단체도 '2·17 대책' 비판

매일 15시간 노동을 해야 사람들이 있다. 바로 학벌위주의 입시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청소년들이 그 주인공이다.

교육부가 '2·17 사교육 경감방안'을 발표한 후 그 동안 금지되었던 보충수업과 강제자율학습이 중·고등학교에 확산되고 있는 실정. 이에 따라 0교시 수업도 모자라 -1교시(새벽 6시대에 등교)까지 생겨났고, 새벽에 집을 나와 밤늦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는 0교시와 야간자율·보충수업의 강제 시행을 막겠다

고 공인했지만, 감시·감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학교현장에서 파행 사례는 계속되고 있다. 실제 광주 한 중학교에서는 '특기적성을 국·영·수 위주로 하는 불법적인 보충 수업' 시행과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식의 강제성을 띤 안내문이 학부모에게 전달되었다.

최근 이러한 사태와 관련해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은 '강제타을학습, 0교시'를 전면 거부하는 교사 선언을 발표했다. 2만 2백 17명의 교사들이 동참한 선언에서 전교조는 "교육부가 보충·자율학습을 사실상 '전면 허용'함으로써 학교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학생과 교사를 잡아 가두는 비교육적인 장소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나마 입시로부터 자유로웠던 중학교와 초등학교마저 입시 학원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학부모에게 요구되는 '불법 찬조금'이나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에게 지급되는 '관리수당' 등으로 또 다른 사교육비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오는 22일 2차 교사선언을 계획하고 있으며, 교육부가 계속 교사들의 우려를 무시할 경우 5월 초부터 강제보충과 0교시 수업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원불교 인권위, 인권운동사랑방 등 9개 인권사회단체들도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강제보충과 0교시 등은 청소년들의 여가시간과 수면시간까지 대폭 줄어들게 해 건강권을 침해하며, 늦은 귀가는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사교육 경감대책은 청소년의 인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쟁적 입시위주 교육은 '2·17 사교육 경감대책'과 같은 표피적, 단기적 대책으로 해결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통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기사 처음으로>

대의제가 민주주의의 전부라는 환상을 버려!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 토론회 열려

4년에 한번 대표자를 뽑는 권리만 허용하는 가짜 민주주의를 넘어 더 많은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7일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 쟁취를 위한 네트워크'와 평화인권연대 등 인권단체들이 개최한 '이것이 민주주의다!'가 그것. 이날 토론회에는 2백 여명이 참석,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의 구상이 탄핵정국과 총선 시기에 떠오르는 '핫 이슈'임을 실감케 했다

토론회의 발제자로 참석한 인하대 이경주 법학교수는 "대의제는 국가정책을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결정하지 않고 대표자를 선출해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국회 구성권과 정책결정권을 분리하는 것이 그 본질"이라고 규정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대의제는 근대혁명기에 봉건적 정치구조를 무너뜨린 부르주아 세력이 정치무대에서 민중들을 배제하기 위해 만들어낸 정치제도"로, 민주주의와는 대립적으로 형성된 역사적 산물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제까지 대의제는 현대사회의 '바람직한 민주주의'로 포장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반면,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구상들은 '모든 국민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도 없고, 그런 자질을 갖추고 있지도 않다'는 논리로 부정돼왔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배경내 활동가는 "그러한 논리에는 국민에 대한 혐오와 불신이 깔려있다"며, "이는 국민이 대표를 뽑는 대의제의 존립 근거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민주주의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제도로써 제안된 것은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 이경주 교수는 국민발의권과 국민소환권이 현행 헌법의 원리에도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 헌법은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를 규정하고 있는데다가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에게 유권자의 뜻에 따를 것을 요구하는 '명령적 위임'을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지도 않다. 이 교수는 "발의권과 소환권은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으로 이해돼야 하며, 나아가 해당 국적을 가진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이주노동자 등에게도 인정되는 '인간의 권리'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독일, 스위스, 미국 등지에서는 국민 혹은 주민 발의·국민소환제가 실시되고 있다.<관련기사 2004년 3월18일, 20일자 참조>

더군다나 최근 부안의 주민투표는 직접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더욱 가깝게 열어 보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부안군대책위 조태경 연대사업국장은 "2백일 동안 핵폐기장 백지화 촛불집회에 참가한 수만명 군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절저하게 무시된 부안의 상황은 이 땅 민주주의의 실종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었음을 지적하면서, "이런 현실을 딛고 치뤄진 주민투표는 주민 스스로 삶의 터전을 지켜내는 자치민주주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시킨 계기였다"고 평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부안에서는 군수퇴진, 예산감시, 자치강화운동 등이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직접민주주의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점도 지적됐다. 배경내 활동가는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 등을 통해 얻고자 하는 인권의 신장은 제도 그 자체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한 시민들의 정치적 의식 성장과 권력관계의 역전으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했다.

직접민주주의가 열여섯 정치공론의 광장은 서로 다른 집단 사이의 대립관계를 투명하게 드러내는 한편, 정치적 의식의 성숙과 소통을 통한 연대의 가능성을 개척하는 장이 될 것임에 분명하다.

<기사 처음으로>

클릭! 인권정보자료 - 군 영창제도를 흔들자!

「군 영창제도의 법적 문제점」

지은이: 최정학 / 16쪽 / 2004년 2월

구타로 인한 자살, 성폭력, 의문사 등 군대내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군 영창제도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소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

서울법대 공익인권법연구소 연구원 최정학 씨가 발표한 이 논문은 규율 확립을 목적으로 사병에 대한 주된 징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영창제도의 법적 문제점을 꼬집고 있다. 영창 내 구타와 가혹행위가 사라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창제도 자체가 합리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최 씨의 주장이다.

전국 각지의 영창은 모두 97곳. 2002년 1월에서 5월까지 영창을 다녀온 군인은 무려 5,209명에 달한다. 최 씨는 영창제도가 기본적으로 신체를 구금하는 강제처분임에도 '풍기 문란',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 등 그 사유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한다. 법관의 영장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또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경우도 드물고 명령에 대한 복종을 강조하는 군대문화로 인해 사병이 징계에 불복한다는 것도 상상하기 힘들다. 그 결과, 영창제도는 지휘관의 재량에 따른 '사적(私的) 형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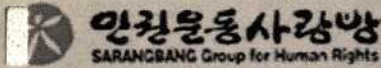
이에 따라 최 씨는 영창제도가 최소한의 합법성을 갖출 수 있도록 손질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영창제도의 폐지를 제안한다. 다른 징계수단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영창제도에 관한 공식적인 실태조사 한번 이루어진 적 없는 현실에서 나온 이 논문은 군 인권 문제에 관한 관심의 폭을 넓히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논문은 서울법대 공익인권법연구소가 2월 내놓은 『공인과 인권』 장간호에 실려있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김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4월 10일 (토)

제 255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논평> 파병 철회만이 유일한 길이다.
2. 차별과 편견의 벽을 허물고
3. 유럽연합, 북한인권결의안 제출

<논평> 파병 철회만이 유일한 길이다.

이라크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이라크 팔루자 지역에서만 미군과 이라크 민병대간의 전투로 3백명 이상의 이라크인이 사망했고, 이중에 다수가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한 민간인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또한 쿠트와 나자프, 쿠파 등 또 다른 이라크 지역에서 이라크저항세력과 연합 주둔군 간의 격렬한 전투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고, 이라크로 군대를 보낸 나라의 사람들이 납치되거나 억류됐다는 소식도 연일 계속되고 있다. 미군에 의해 봉쇄된 팔루자 지역에 식량과 의약품을 보내는 바그다드 시민들, 곳곳에서 점령군에 맞서는 이라크인들... 이들의 저항은 이라크 전역에 전파되는 '민중봉기'의 단면이다.

이라크 민중을 해방시키겠다던 오만한 가면도 일찌감치 벗어 던지고 침략군으로 활보하던 미군이 지금은 보복심에 불타 팔루자 지역을 봉쇄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미군이 저항하는 이라크 민중의 한가운데 서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해방은커녕 고통과 빈곤한 삶을 가중하는 침략 전쟁을 몰고 온 주둔군에 대한 이라크 민중의 분노와 적대감을 일부 강경파의 대응인양 애써 무시하는 침략군의 방자함은 여전하다. 해방이든 자유이든 그 어떤 찬란한 이름을 뒤집어쓰고 있다고 해도 이라크 민중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한 그것은 침략일 뿐이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파병 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침략전쟁을 옹호하는 정부와 국회의 주장은 이라크 민중을 외면한 괴변이고, 파병을 합리화하는 논리는 추악한 욕심을 감추는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의 이라크가 똑똑히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정부와 국회는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파병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난해의 파병결정에 이어 추가파병까지, 이라크 민중에게 더할 수 없는 고통과 한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죄악을 덮어씌우는 정부와 국회의 반민중적인 선택에 대한 심판이 이번 총선에서 잦대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부는 이라크 민중의 분노와 적대감에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서회·제마 부대를 철수하고 추가파병 계획을 철회하라.

<기사 처음으로>

차별과 편견의 벽을 허물고

동성애자 인권운동 10년 ... 과거와 현재, 미래를 말하다

동성애자인권운동이 10년을 맞았다. 94년 남성동성애자모임 '친구사이'와 여성동성애자모임 '끼리끼리'가 결성된 이후 이들은 동성애를 '타락한 성' 이상으로 보지 않는 사회적 편견의 장벽에 균열을 내며 10년을 걸어왔다.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단체 '친구사이'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4일 동안 그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새로운 인권운동을 모색하는 10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9일 친구사이는 '두 번째 커밍아웃-친구사이, 동성애자 인권 10년'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마련, 동성애인권운동 내부를 성찰하고 운동 전망을 논의했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재운 부대표는 발제를 통해 현재 동성애자 인권운동에 세 가지가 부재하다고 비판하며 자기반성과 애정 어린 충고를 포함하는 '비판과 견제의 문화', 장기적 전략과 효율적 전술을 뒷받침하는 '비전제시', '연대 모색'을 꼽았다. 한 부대표는 앞으로 운동의 전문성을 위한 '전업활동가의 양성'과 사안을 공유하고 공동대응하는 '인권운동단체간 기본적 연대' 그리고 현실적 경험에서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이른 개발과 교육'을 통해 동성애자인권운동 내부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동성애자인권운동은 지난 10년 동안 우리사회의 견고한 차별과 편견의 벽을 부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동성애 관련 인권의제를 제기해왔다. 동성애자들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 동성애 학교를 여는 등 동성애자들의 자아정체성 확립을 위해 노력해온 한편, 퀴어 영화제 개최를 통해 동성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고자 했다. 또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동성애자 차별을 삭제토록 요구하고 정부의 에이즈 정책이 올바르게 시행되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해왔다. 특히 97년 노동법과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에 맞서 노동자 총파업에 결함하고, 98년부터 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위한 인권단체 공동행동에 함께 했다.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의 박수진 활동가는 운동방식이 분화되고 다양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커밍아웃 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그 사람들이 느끼는 현실은 실상 변한 게 거의 없어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박 씨는 "특히 레즈비언들은 동성애자이면서 또한 여성이기 때문에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차이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채운 부대표는 억압과 편견이 생긴 원인으로 이제는 '이성애주의'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애주의'는 이성애자로 하여금 성적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억압을 인지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미혼모, 결혼거부 미혼남녀까지도 억압한다는 것이 한 부대표의 주장이다. 한 부대표는 "앞으로 '이성애주의'에 대항해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피해 입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친구사이(친구사이)는 11일까지 서울아트시네마에서 기념식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영화를 상영한다.(chingusai.net)

<기사 처음으로>

유럽연합, 북한인권결의안 제출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④

유럽연합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북한인권 관련 결의안을 7일 유엔 인권위원회(아래 유엔 인권위)에 정식으로 제출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번 결의안 발의에는 53개 인권위원 위원국 중 유럽연합 소속 국가모두와 미국, 호주,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했다. (투표권이 없는 나라까지 포함하면 37개국) 이번 결의안에 따르면 새롭게 임명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올해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제 59차 유엔 총회와 내년 3-4월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61차 유엔 인권위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작년의 결의안은 북한이 기존의 식량권, 고문, 종교적 불관용에 관한 특별보고관과 자의적 구금에 대한 실무분과와 같은 유엔 인권위의 제도와 협력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회기에 제출된 북한인권 결의안에는 인권침해 국가에 대해 유엔 인권위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조치로 알려진 나라별 특별보고관 임명이 포함됨으로써 북한에 대한 유럽연합과 미국의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결의안 내용에 대한 논란이 인권위 안팎에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당사국인 북한은 '결의안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주 제네바 북한대표부의 한 외교관은 "이번 결의안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유럽동맹(연합)의 북조선에 대한 적대적 대결자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북한의 실질적인 인권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은 커녕 오히려 방해가 되고있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북조선 정부는 작년에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현재 아동권리위원회의 두 위원이 북한을 방문해서 아동권에 대한 인권현황을 조사하는 중"이며 "이러한 노력을 무시하고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추진하는 결의안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유럽연합의 장국으로 이번 결의안을 제출한 아일랜드의 외교관은 "북한이 나름대로 노력은 하는 듯 하지만 유럽연합의 기대수준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태도를 바꾸어 결의안을 인정하고 이의 실행에 협력하지 않는 한 유럽연합은 압력의 강도를 높여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럽연합 내에서 강경 입장을 주도하고 있는 영국의 한 외교관은 "북한이 작년과 올해 인권조약기구와 적극적 협력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작년 결의안의 효과"라며 보다 강력한 결의안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결의안 내용에 대해 국제인권단체들은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 반면 현재 제네바에서 결의안 찬성 로비를 위해 대표단을 파견한 '북한인권시민연합'의 한 관계자는 "올해의 결의안 내용에 만족하며 보다 많은 국가가 찬성표를 던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로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주 동안 제네바에서 직접 유럽연합 국가들 대상으로 로비를 한 '좋은 벗'의 한 관계자는 "결의안 내용에 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들어가고 인도주의 지원 증대를 통한 북한의 식량권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만 하나도 반영된 것이 없다"며 결의안의 내용에 실망감을 표명했다. '좋은 벗'과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인권단체연합'(FIDH)은 장 지글러 유엔 식량권 특별보고관과 함께 북한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고, 유럽연합의 결의안이 제출되기 전 날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식량난과 인권으로서의 식량권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기자회견

건에 참가한 세계식량프로그램(WFP)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돕기 위해 예년과 마찬가지로 작년에 인도주의 지원을 위한 재정모금을 전개했지만 기대만큼 국제사회의 지원을 얻지 못했다"며 "북한 핵문제로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인도주의 지원 사업이 북한 인권결의안으로 인해 더욱 곤경에 처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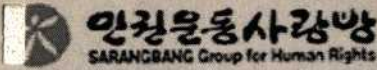
한편 인권고등판무관실의 한 관계자는 결의안에 대해 "북한이 작년의 결의안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나라별 특별보고관까지 임명될 경우 또 다른 미얀마(버마)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엔 인권위는 미얀마에 대한 특별보고관을 지난 1992년 임명했지만 미얀마의 협력거부로 해마다 결의안이 제출, 채택되었지만 최근까지 실효성 있는 성과를 보지 못한 바 있다. 그는 더 나아가 "기술협력 (technical cooperation) 프로그램이 결의안에 포함됨으로써 인권고등판무관실이 결의안의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북한의 인권개선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막혔다"며 결의안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간접적으로 표시했다.

유엔 인권위가 이제 5주 쯤 접어들고 있지만 북한과 유럽연합은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아무런 공식적 대화와 비공식 접촉조차 없이 자존심을 동반한 '힘 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정부는 이번 유럽연합의 결의안 내용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작년 북한인권 결의안은 찬성 28, 반대 10, 기권 14로 채택되었고 한 국정부는 참가하지 않았다. 올해 북한인권 결의안은 15일 또는 16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4월 13일 (화)

제 255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 리 하루소식
하 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경찰의 '공권력 남용' 어디까지!
2. 주간인권흐름 (2004년 4월 5일 ~ 12일)
3. 투표함에 심는 민주주의의 씨앗
4. ㉠ 오두희의 인권이야기 ㉡ 가난한 당신에게 보내는 평화의 편지

경찰의 '공권력 남용' 어디까지!

'탄압'이 아니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정치활동 보장' 논의가 필요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불법적으로 인터넷 아이피 추적, 휴대폰 추적, 전화 감청, 가택수색 등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민정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의 부인 임은심 씨는 12일 공무원노조에 대한 공권력남용 탄압 사례 기자회견에서 "어디를 가든지 항상 감시, 미행 을 당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심지어 경찰은 대학생인 민 씨의 딸에게도 수시로 전 화를 하고, 교수까지 자수 회유를 위해 '동원'했다. 영장도 없는 불법 가택수색 역시 여 전했다. 서울경찰청 소속 형사 2명은 지난 3일 영장 없이 무단으로 김정수 부위원장의 집에 들어가 아이들에게까지 '아버지의 자수'를 종용했다. 인터넷 감시를 통한 인권침해 또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강동진 사무처장은 PC방에서 경찰에 의해 영장도 없이 3시간 동안 불법 체포, 감금당했다. 강 씨가 김영길 위원장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한 사이트에 접속한지 10분도 안돼 20여 명의 경찰이 출동해 PC방을 포위하고 손님들 전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던 것.

민주노동법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노조에 대한 과잉수사의 위법성을 조목 조목 지적했다. 수사기관의 인터넷 아이디 및 전자우편 확인 위치 추적과 전화 감청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수사권 남용으로써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는 비판이다. 압수수색영장 없는 가택 침입에 대해서도 "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을 위반한 불법수색(야간·공동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강동진 씨의 불법구 급에 대해서도 역시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과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이같은 수사기관의 인권유린에 대해 국가인권 위원회에 진정하고 국가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노조 법률지원단 맹주천 변호사는 "경찰이 공무원노조의 민노당 지지 선 언을 공무원노조 탄압에 이용하려 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공무원노조의 특정 정당 지지가 합법이나 불법이냐가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활동 보장'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달 전국대의원대회에서 특별결의문을 통해 "민주노동당 지지"를 공 개적으로 선언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김정수 부위원장 등 공무원노조 간부 3명을 구 속했다.

<기사 처음으로>

주간인권흐름 (2004년 4월 5일 ~ 12일)

1.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 왜 안 되는데!

공무원노조 "민노당지지" 선언...검·경, 지도부 구속 방침 밝혀(4.4)/ 공무원노조 "정치 적 의사표현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며, 업무상 정치적 중립과 정치적 의사표현은 구분되어야 할 것" 주장(4.5)/ 검찰, 공무원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노조 김정 수 부위원장 구속(4.6)/ 공무원노조, 전교조, 민중연대 등 '공무원, 교사의 정치참여 보 장 촉구' 결의대회 개최(4.10)

2. 점령군은 가라.

미군, 이라크 팔투자 지역 봉쇄...이라크 전역에서 점령군과 시아파 민병대 대규모 무장충돌, 이라크인 사망자 속출(4.5)/ 한국인 2명 이라크 시아파에 14시간 억류 후 풀려나(4.6)/ 미군의 팔투자 지역 진입작전에 맞서 이라크 민병대 거센 저항...미군 헬기 팔투자 사원 공격, 이라크인 40여 명 사망/ 이라크 강경 시아파 민병대, 남부지역 곳곳에서 점령군에 저항/ 일본, 불가리아, 노르웨이 등 파병국, 자국내 군대 철수 여론 다시 일어(4.7)/ 한국인 목사 8명 한때 피랍, 일본인 3명 이라크 저항세력에 납치...국내 추가파병 반대 여론 절화/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 '파병 찬성의원 명단' 발표...낙선운동 돌입 밝혀(4.8)/ 이라크 내에서 주둔군 국민 억류 이어져(4.9)/ 이라크 무장 저항세력, 일본인 석방의사 밝혀(4.11)

3. 기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투표권 보장 위해 헌법소원...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및 부재자 투표제도 개선 요구(4.6)/ 문화연대 등 5개 시민사회단체, 시청앞 광장 '잔디조성' 및 '유료사용비, 사용허가 제한을 규정한 조례(안)' 비판(4.6)/ ICC 로마규정' 비준에 따라 정부, 이행입법(안) 입법예고...인권단체 '반인권 국가범죄 및 과거 사건에 대한 소급 적용 가능한 입법 필요' 주장 (4.7)/ 유럽연합, 60차 유엔인권위에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북한인권결의안 제출 (4.7)/ 송두율석방대책위, 국가보안법 3조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입부'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위배라며 헌법 소원 청구(4.7)/ 영등포구치소 교도관 가혹행위 관련 인권·노동단체 진상조사 촉구...법무부 장관, 사건규명 및 교정행정 전반 조사 약속(4.8)

<기사 처음으로>

투표함에 심는 민주주의의 씨앗

국민발의 용지 투입은 '대의민주주의 한계' 상징

4.15 선거에서 투표행위를 넘어 민주주의를 확장하자는 상징적 시도로 자신들의 요구를 적은 종이를 직접 투표함에 넣는 행동이 전개될 예정이다.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쟁취를위한네트워크(아래 네트워크) 등은 투표일인 15일 '국민발의제 도입', '파병 철회' 등을 요구하는 용지를 투표용지와 함께 투표함에 넣을 계획이다.

네트워크 참여단체 중 하나인 인권운동사랑방은 투표함에 용지를 투입하는 것이 선거 무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외부의) 우려에 따라 용지투입 운동을 잠정 중단하고 지난 1일 용지투입이 선거무효의 근거가 되는지를 선관위에 질의했다. 정당한 선거권 행사를 무효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했던 것. 이에 지난 9일 선관위 지도과 신광호 담당자는 "직접적인 선거무효 사유로 보기는 어렵지만, 결과를 보고 판단해서 당락을 바꾼다거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면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투표함에 다른 종이를 넣는 것이 국민의 보통·직접·평등·비밀 투표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도, 공정선거를 저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용지투입'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내렸다. 따라서 선거를 무효화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정치적 요구가 담긴 종이를 넣기로 결정했다.

이번 행동은 투표함에 간헐적 권리에 숨통을 틔어 주고 대의민주주의 선거제도의 한계를 문제제기하기 위한 시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에서 특정인사를 찍는 것' 외에 정치적 의사를 표출할 통로가 전무한 것이 현재의 정치 지형이다. 투표함에 다양한 정치적 요구를 담은 '발의용지'를 투입하는 것에 대해 '다른네트워크' 유제명 씨는 "그동안 선거에서 객관식의 주어진 틀 안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정치적 요구 종이를 넣는 것은 국민이 직접 정치에 나서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제도적 틀이 얼마나 부당한지 드러날뿐더러 국민의 인식도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네트워크는 10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국민소환제·발의제 도입을 위한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다.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자유롭게 자신의 요구를 주장하는 한 마당이 펼쳐졌다.

<기사 처음으로>

○ 오두희의 인권이야기 ○ 가난한 당신에게 보내는 평화의 편지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평화 유랑단'이라 하는데 도대체 '평화'란 무엇이지?" 그 말을 들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그 말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당신에게 내가 먼저 물겠소. 공장에서 일하다 해고된 사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야 물론 복직이겠지요." "그럼 평생 농사만 짓고 사는 사람이 미군 때문에 땅을 빼앗긴다면, 이들이 절실히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요. 바로 땅을 지키는 것이겠지요." "그럼 이주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지?" "그건 아마 강제추방 당하지 않고 안정되게 일하는 것이겠지요." "개발 때문에 자연이 파괴될 때 그 안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요?" "물론 생명이겠죠. 아따, 이제 그만 물어 봐요. 내가 당신에게 물어본 것은 평화가 무엇이나지, 이런 시시한 농담 따먹기 하자고 한 것은 아니요."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난 겨울부터 전국을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가는 곳곳, 열심히 일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도처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디 한곳 성한데 없이 활취고, 끊어지고 파헤쳐진 자연은, 마치 힘센 자들에 의해 힘없는 여성이 강간을 당한 모습과 같았습니다. 생동하는 대지는 이미 영양분이 상실되어 말라버린 기아 난민 같기도 했습니다. 참담함으로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절망감을 느꼈지요. 자본과 권력의 힘 때문에 곳곳이 썩고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가르치는 자본의 정경에서 점점 커지는 인간의 탐욕과 무관심 때문에 절벽을 느꼈지요.

그러나 오직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희망 없는 희망'이라는 각각의 현장을 오가며 변방의 새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힘없는 이들과 함께 부당함에 맞서 싸우고 있는 이들은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그저 자신의 신념에 따라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드러나지도 않고, 명예도 없고, 변변한 집 한 채 없이 살아오며 얼굴은 지쳐있고, 행색도 남루하고.... 누가 봐도 요즘 잘 나가는 주류세대가 아닌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열정이 넘치던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길을 걸어오며 이미 몸은 병들어 있고, 생활은 지쳐있고, 고단한 삶의 무게로 사사로운 취미 하나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우직한 바보들이 없었다면 이 자본주의 사회는 그 모순으로 인해 어찌면 폭발해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나마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병든 사회가 이정도라도 유지되는 것 같아 화도 나고 슬프기도 했지만, 그러나 소나무 같은 이들은 앞으로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지금처럼 살아갈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가난한 혁명가, 폭력의 놀음이 역겨워 화려한 데뷔를 거부한 가난한 시인들 처럼, 이들은 반평화의 현장과 삶을 바꾸는 소신이 비록 싸구려 인생으로 흘러가지만, 더 큰 물질적 소유를 원하지 않는 삶을 선택하고 그만큼 실천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그들과 함께 비는 마음으로 갈 뿐입니다.

길 위에서 깨달은 평화란 거창하고 세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것, 부당한 것이 본래대로 회복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회복을 위해서는 팽팽한 긴장관계가 형성되어도 이를 헤쳐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척박한 한반도, 빈곤과 폭력과 개발이 멈추지 않는 아시아에서 자연과 인간의 삶을 복원하려는 인간의 투쟁 없이 온전한 평화란 쉽게 우리 앞에 찾아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두회 님은 평화유랑단 '평화바람' 단원입니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4월 14일 (수)

제 255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 리 하루소식
하 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4.20' 차별 철폐, 해방의 날로
2. > 즐거운 물구나무 < 가족에 대한 대안을 만들자!
3. 이라크 내 미군 점령 1년, '인권은 실종'
4.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구속 수사 이어져

'4.20' 차별 철폐, 해방의 날로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 19일째 농성 중

13일 오후 서울역 부근의 육교 아래 도로를 점거하고 '장애인 차별철폐'를 주장하던 35명의 장애인들과 활동가들이 용산, 수서, 방배경찰서 등으로 연행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또 다시 전원연행. 지난달 26일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첫날, '최육란 열사 추모 문화제' 참가자 80여 명의 강제 연행으로 시작된 '420투쟁'은 경찰서와 광화문 길거리를 안방으로 삼았다.

4월20일 '장애인의 날'은 역도경기장에서 하루 외출을 즐기는 날이 아니라 '장애인 차별' 고리를 끊는 해방의 날이 되어야 한다고 외치는 장애인들이 지난달 26일부터 19일째 광화문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2002년부터 '420투쟁'을 벌여 온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아래 420기획단) 공동집행위원장 박경석(노들장애인야간학교 교장)씨는 지난 3년 동안 정부의 정책이나 태도에 있어서 미세한 부분의 변화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집행위원장은 "420투쟁만이 아니라 2001년부터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함께 벌이고 있는데 처음에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들, 예를 들면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것이 라든지 시내버스 노선에 저상버스를 운행하기로 한 것 등 정책의 변화가 있기는 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한다. 장애인들의 권리보장 요구에 여전히 정부나 관련기관들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것에 박 집행위원장은 분통을 터뜨린다.

이번에도 420기획단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을 통한 노동권 확보 △장애인의 경제적 권리를 보장해 주는 장애인연금법 제정 △'평등한 통합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장애인 교육법 제정 등 13가지 요구 안을 내놓고, 고건 총리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농성 19일이 되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 13일 도로점거 역시, 1000개의 좌석 중 휠체어 장애인좌석이 고작 2개뿐인 고속철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의 외침에 철도청이 침묵하면서 벌어진 절규였다.

장애인을 차별하는 정부의 정책이나 태도뿐 아니라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아직 부족하다. 박 집행위원장은 "여전히 시혜와 동정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는 면이 있고, 장애인의 권리를 위한 투쟁들을 일반적인 권리쟁취를 위한 운동이나 어떤 운동의 흐름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것 같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또한 "장애 때문에 사회생활을 못하는 문제는 국가나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지 개인이나 가족이 떠맡아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 집행위원장은 특히 장애인 차별의 문제는 우리사회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한다. 박 집행위원장은 "자본의 질서를 따르고 그대로 인정하며 합리성과 효율성을 따지면 과연 누가 이사회에서 장애인을 고용하겠나"고 물으며 "이러한 구조에서 장애인은 사회에 진입할 수도 없고, 경제활동을 하게 된다 해도 수많은 차별에 봉착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장애인차별철폐 운동은 각 부문 요구사안을 가지고 정부나 기관을 상대로 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우리사회 구조 상 발생하게 되는 차별의 본질을 부각시키는 일도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420기획단은 20일까지 광화문 세종로에서 농성을 지속하면서 장애인 교육 문제, 장애여성의 차별 문제 등을 계속 알려나가는 한편, 매일 저녁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제를 열어갈 예정이다.

<기사 처음으로>

▷ 즐거운 물구나무 ◀ 가족에 대한 대안을 만 들자!

누구라도 한번쯤은 혈연이라는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 다른 공간으로의 이동을 꿈꾸기도 한다. 나 또한 가족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외치다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이란 없다"는 가족의 으름장 앞에 독립의 꿈을 접은 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최근 장애인여성인 한 선배가 가족으로부터 독립한 후 친구들과 함께 집을 얻어 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는지 물었다. "혈연중심의 가족 관계가 주는 수직적 억압에서 벗어나 평등한 관계를 만들고 싶었다. 물론 사소한 갈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함께 사는 친구들이 장애를 가진터라 공감대 형성이 빠르고 서로 잘 지지해준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결혼 혹은 혈연중심의 가족이 아닌 다른 삶을 선택하고 있는 사람에게 때때로 생각지 못한 고통이 다가오기도 한다. 만약 같이 살고 있는 친구가 병원에서 수술이더라도 받을 경우 그 선택은 친구의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없으므로 수술동의서에 서명할 수 없다. 또한 경찰에게 연행될 경우 체포통지서는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가족에게 전달된다.

'가족' 구성의 시작인 '결혼'. 사람들은 왜 결혼을 하고 가족을 만들까? '사랑하니까'라는 가장 일반화된 답변부터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것이다. 답변들에서 나타나는 일관된 맥락은 '친밀감에 대한 공유를 오랫동안 지속시키고 싶은 욕망'이 아닐까 하는 나름의 결론을 내려본다. 그것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족을 만든다. 하지만 친밀감의 공유가 꼭 '결혼' 혹은 '가족'이라는 틀을 통해서만 구현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 틀에 포함되지 않는 친밀감은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이 사회에서 '결혼 혹은 가족'이라는 틀은 결국 '이성애, 핵가족'의 중심성으로 대표된다. 이성애 중심의 핵가족이 아닌 다른 형태의 모습이 있냐고, 그런 사람이 사회적 존재일 수 있느냐고 묻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것이다. 그 물음에 대한 답으로 동성애 커플, 독신가구,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가구, 복지·생활공동체 등을 떠올려 보시라. 우리의 제도와 법이 이성애 중심의 결혼이나 핵가족을 전제로 구성된다면 이혼율 47%를 육박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진장가족의 붕괴'라는 공포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는 가족의 경계에서 무엇이 발생하는지 귀 기울이고 눈 여겨봐야 한다. 친밀감의 연대가 꼭 '결혼과 가족'이라는 제도를 통해서만 완성된다는 법은 없다.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로써 '가족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보자.

<기사 처음으로>

이라크 내 미군 점령 1년, '인권은 실종'

과잉 군사력이 부른 무분별한 발포, 고문, 살인

#1. 지난해 9월 17일 팔루자의 한 결혼식에서 미군이 총을 발사해 열네 살 소년이 죽고 여섯 명의 사람들이 다쳤다. 결혼식에서 축하의 의미로 허공을 향해 총을 쏘았을 때 미군들은 그것이 자신들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

#2. 지난해 11월 10일 나집에 있는 한 농가에 느닷없이 미군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30분 이내에 떠나라고 명령했다. 곧 두 대의 F-16 전투기가 집을 폭격했다. 며칠 전 미군 호송 차량이 공격받은 것과 관련해 체포된 이라크인 여섯 명의 무기가 그 집 근처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 이유.

국제앰네스티는 이라크 전쟁 1년 동안 이라크에서 일어난 인권 침해 사례들을 발표했다. (「Iraq」, amnesty international, 2004)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만여 명의 이라크인들이 전투 중에 죽었다. 게다가 직접적인 대치 상황이 아닌 '군사 사고'를 통해 발생한 죽음은 제대로 통계조차 파악되지 않는다. 전쟁이 발발한 일년 동안 이라크 사람들은 거의 매일같이 죽음을 당하지만 대부분의 사건들은 일상적으로 지나치고 만다는 것. 미군이 발사한 총격으로 부상당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보고된 1만4백여 건의 사고 중에는 뚜렷한 이유가 없는 것들이 많다. 미군이 군사력을 과잉 사용한 결과이지만, 사건의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기소된 적도 없다.

이외에도 이라크인들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 사례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연합군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로 △비무장 시위대를 향한 발포 △고문과 학대 △무분별한 가택 수색과 파괴 △군사력의 과잉 사용에 의한 살인 등이 보고되었다. 또한 전쟁 상황 아래에서 법과 질서의 혼란으로 인한 △복수 △살인 △납치 △여성에 대한 폭력 등이 발표되었다.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은 심각한 상황으로 "전쟁 후 법과 질서의 파괴로 유괴, 강간, 살인과 같은 여성들에 대한 폭력이 늘고 있다"며 "여성들은 폭력의 희생자가 되더라도 구제받을 아무런 희망도 가지지 못한다"고 국제앰네스티는 지적하고 있다.

이라크 전쟁 한 달만에 미국은 '중전을 선언하였고 그로부터 거의 1년이 지났지만 이라크인들의 저항은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이 이라크인들에게로 권력이양을 약속한 6월 30일이 가까워오고 있지만 이라크인들은 오히려 더욱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다. 얼마전 팔루자에서는 이라크인과 연합군 간 전면적인 전투가 발발해 "며칠만에 300명 이상의 이라크인이 죽고 수백명이 다쳤다"고 '이라크점령감시(Iraq Occupation Watch)'는 전했다. 이 사건의 파문은 계속해서 확산되어 이라크인과 연합군의 대립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대량 살상무기가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은 이라크에 대한 전면적인 침략을 감행했지만, 대량 살상무기를 발견하지 못하자 '이라크를 후세인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라크 점령 1년이 흐른 지금, 미국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이라크 내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인권을 무기로 한 침략은 오히려 이라크인의 인권을 악화시키고 있다.

한편, 이라크의 독립을 위한 만민총회와 자유총선거를 준비하는 흐름이 일어나고 있고, 총회가 불가능해질 경우 이라크 민중에 의한 독립국가 건설을 지지하는 국제회의가 이라크 부근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www.focusweb.org 참고)

<기사 처음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구속 수사 이어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영민 씨가 12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구속이 확정됐다. 현재 영등포경찰서에 수감중이며 구치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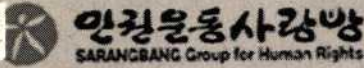
영민 씨는 지난 1월 26일 반전평화, 사회변혁의 신념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한 바 있다. 영민 씨에 이어 지난 2월 26일 구속된 임태훈 씨 사례에서 보듯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이들의 구속수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병역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합헌여부는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4월 15일 (목)
제 255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 의 하루소식
하 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논평> '잘못 배달된 용지'의 진실
2. 정치적 권리의 확장을 위하여
3. '북 인권개선' 고립화 전략으로는 안돼
4. 투표할 때 '주민증' 대신 '다른 신분증' 쓰시다!

<논평> '잘못 배달된 용지'의 진실

그동안 국민 발의권과 소환권의 보장 요구에는 도통 관심을 보이지 않던 언론이 이러한 요구를 담은 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행위만을 유독 문제삼으며 연일 선정적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을 전제로 용지를 넣는 행위의 불법성만이 부각되는 사이, 발의권과 소환권에 대한 요구가 가진 애초의 의미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렸다. '법치'의 이름으로, '신성한 선거'의 이름으로 지금 언론이 선거만을 유일한 주권 행사의 통로인 양 주술을 되뇌는 것은 확장된 주권의 행사를 꿈꾸지 못하도록 국민들의 의식을 결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우리는 선거권이 수많은 피와 땀을 흘려 얻어낸 소중한 결실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운동도 선거권에 대한 존중에서부터 출발한다. 만약 투표함에 다른 용지를 넣는 행위가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면 당연히 중지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조작된 투표용지가 투입되거나 다른 이들의 투표용지를 훼손시키지 않는 다음에야 개표와 동시에 분리 폐기될 용지가 어찌 다른 이들의 선거권 행사를 침해하고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가. 언론의 호들갑이나 선관위, 법무부의 엄포는 마치 시험 답안지와 함께 다른 시험 방식도 가능하다고 제안하는 종이를 한 장 더 제출하는 학생에게 공정한 시험을 방해한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용지를 넣는 이 작은 행동에는 큰 의미가 담겨있다. 용지 넣기는 몇 년만에 찾아온 유일한 주권 행사의 순간에 이제 곧 주권자의 자리를 박탈당해야 하는 국민들의 어이없는 처지를 상징적으로 고발한다. 주권은 일상적으로 행사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 용지를 넣는 작은 행동에서부터 주권자에서 통치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악순환에 대한 직접적인 거부기 시작된다. 국민이 주권자임을 드러내는 투표용지는 '수치'로 환산된 후 굉장 쓰레기통에 처박될 것이지만, 그보다 일찍 쓰레기통으로 들어간 이 요구를 담은 용지는 오래도록 남아 정치적 울림을 갖게 되는 역설이 바로 여기에 있다.

엄밀히 말해 요구 용지가 투표함에 들어가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격이다. 그러나 이 '잘못 배달된 용지'는 모두가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는 주권이 국민들에 의해 일상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제도의 부재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이 용지가 제대로 배달되기를 원한다면 발의제와 소환제를 시급히 도입하면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한, 투표함에 다른 용지를 넣는 행위도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기사 처음으로>

정치적 권리의 확장을 위하여

국민발의제·국민소환제 도입을 요구하는 서명, 정부에 전달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의 도입을 위해 서명활동, 캠페인 등을 벌여온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쟁취를위한네트워크(아래 네트워크)는 선거를 하루 앞둔 14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그간의 활동을 보고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네트워크는 3월 중순부터 서명운동과 토론회, 만민공동회 등을 진행해 왔으며 이날 기자회견 후에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를 요구하는 서명용지를 고건 대통령 권한 대행 앞으로 보냈다.

다른 네트워크 김정희원 씨는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는 3월 12일 탄핵소추안 가결과 같이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국회의 결정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

며 "이는 국민들이 공직자를 심판할 권리를 갖고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등 직접적인 참정권을 마련하기 위한 통로를 만드는 것"이라고 네트워크 활동의 목적을 설명했다.

또한 네트워크가 제안하는 4.15총선 국민발의용지 넣기 운동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허혜영 활동가는 "현 대의제 아래에서는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권리는 선거권으로만 제한되고, 선거시기가 지나면 국민의 입이 틀어 막혀버린다"며 "이 행동은 오로지 대표자를 뽑는 것에만 제한된 참정권의 확장을 요구하는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네트워크는 "각 정당들의 국민소환제 도입 입장이 '립 서비스'로 그친다면 국민들의 분노가 다시 거리로 쏟아질 것"이라며 "보수정치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국민발의제도에 대해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정당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잘못을 저지른 국회의원을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넘어 국민이 직접 자신의 정치적 요구를 발의하고 결정할 수 있을 때만이 국민의 정치적 권리가 온전하게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사 처음으로>

'북 인권개선' 고립화 전략으로는 안돼

국내 인권단체, 미 의회에 북한인권법안·북한자유법안에 대한 의견서 발송

현재 미 의회에 계류중인 북한자유법안과 북한인권법안이 한반도 평화와 인권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인권사회단체들이 이에 관한 의견서를 미 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민변, 좋은벗들 등 9개 인권사회단체들은 "두 법안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대화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북의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도 차단할 것"이라며 각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미 의회와 관련 사회단체, 재미동포들에게 보내겠다고 14일 밝혔다.

북한인권법안은 3월 31일 미 의회 국제관계위원회를 통과했고 앞으로 하원 법사위와 본회의 그리고 상원의 통과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북 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는 어떠한 정치적 목적성도 배제한 채 인권 자체의 옹호와 증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제한 뒤 두 법안이 '북 인권을 정치화시켜 북 체제의 붕괴를 피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강하게 제기했다. 북한인권법안은 목적 중 하나로 '민주정부 하의 한반도 통일'을 삼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은 "북한 정부와 한반도에 사는 사람에게 한국 정부 하의 흡수 통일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할 위험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자유법안 역시 대량살상무기 문제의 해소라는 정치, 군사적 전략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인권을 정치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인권사회단체들은 단성적인 식량난과 경제위기로 인한 기아와 빈곤 문제가 북 인권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자유법안 Sec403은 '인도적 지원이 북에 의해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지 않고 필요한 사람이 수혜를 받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이 입증되지 않으면 인도적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북 인권개선과 경제 재건에 필요한 인도적, 비인도적 지원을 차단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안 Sec202도 '인도적 지원이 전국에 걸쳐 분배되고 제공되도록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조치를 북 정부가 취하기 전까지 인도적 지원제공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은 "북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은 조건 없는 대북 지원을 통한 인도적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조치들은 장기적으로 북 주민들의 정치적 자유의 신장을 돕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두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탈북자에 대한 보호 조치들이 난민촌 건설이나 미국으로의 기회망명 등 탈북을 더욱 양산시킬 것으로 전망돼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설득력이 높다. 인권사회단체들은 "탈북이 북의 식량난과 그로 인한 인권 상황의 악화로 기인한 것인 만큼 북의 주민들이 충분한 식량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북을 원조하는 동시에 탈북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두 법안이 전체적으로 북에 대한 압박과 고립을 의도하고 있다며 이러한 접근으로 북 인권을 개선할 수 있다는 기본인식과 접근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의 인권개선, 민주주의 향상, 한반도 평화는 북과 관련국들이 상호 체제를 인정, 존중하는 가운데 진작될 수 있다"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권고했다.

<기사 처음으로>

투표할 때 '주민증' 대신 '다른 신분증' 쓰시다!

'경로우대증, 장애인수첩, 운전면허증, 기술자격증...'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이번 4.15총선에서 '주민등록증' 대신 '다른 신분증' 사용을 제안하고 있다. 주민등록증은 열 손가락 지문날인을 해야만 발급이 되는 신분증이고, 지문

날인은 인격권, 신체의 자유,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활동가는 "지나친 정보수집으로 과도한 신분확인 능력을 지닌 주민등록증은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주민등록증의 사용을 강제하고 있다"며 "다른 신분증이 있어도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사회생활에 곤란을 겪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지문을 날인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간첩색출 등의 명분으로 만들어진 주민등록증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첫 걸음으로 주민등록증의 지나친 신분확인능력을 거부하고 다른 신분증을 사용하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지난 200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장에 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의 범위를 '공무원증을 발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운영·경영하는 사업체 등에서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 등 매우 광범위하게 유권 해석하여 인정한 바 있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화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4월 17일 (토)
제 255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 의 하루소식
하 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성명>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에 부처
2. 복인권 개선, 고립과 압박으로 미지수
3. 형법이 과연 교화를 가져올까?

<성명>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에 부처

모든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해야 하며, 인류는 지구상의 어느 사회에서나 인권이 신장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야 함이 마땅하다. 한편으로 우리는 인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특정 사회를 옥죄는 수단으로 삼는 시도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한다. 정치적 의도에 의해 편입된 인권공세가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없음을 물론, 도리어 인권상황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난 역사를 통해 보아 왔기 때문이다. 유엔은 어떤가. 유엔은 인권의 증진을 위한 훌륭한 인권기제를 갖추고 있지만, 때때로 강대국의 입김에 휘둘려 인권의 개선보다 정치적 대립과 반목을 부추기는 장으로 악용되어 왔다는 점을 지나칠 수 없다.

이와 관련, 제60차 인권위원회가 4월 15일 채택한 대북인권결의는 인권개선을 위한 공정하고 균형잡힌 시각보다 편향되고 이중적인 시각을 보여줌으로써, 강대국들이 주도하는 정치공세의 혐의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

이번 대북인권결의는 북 인권 문제만을 전담하는 특별보고관을 신설한 것이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 지난해 결의에 비해서도 훨씬 강도가 높아졌다. 지난 1년 동안 북 정부는 사회권규약 및 아동권협약에 따른 보고서 제출과 관련 심사회의 참석 등을 통해, 유엔 인권기구들과의 협력 의지를 보여준 바 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로서, 유엔인권위원회는 북 정부의 이러한 협력적 노력이 북 인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신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함이 마땅했다. 그러나 유엔인권위원회는 이와는 반대로 북 정부가 사실상 수용할 수 없는 더 강경한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유엔과 북 당국의 협력 속에 인권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여지를 오히려 축소시킨 꼴이 되었다. 미 의회 내에서도 정치적 의도가 농후한 '북한인권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점을 상기할 때, 이는 인권 문제조차 북을 압박하고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수단의 일환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탄식이 절로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대북인권결의문이 담고 있는 내용의 편향성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북인권결의문은 북 인권 문제를 묘사하는 단락에서 수용소의 문제 및 자유권의 억압 등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 실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북 정부가 나서서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긴급하고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결의문에는 치밀한 사실 확인 과정 없이, 한 나라에 대한 비방이 될 수 있는 치명적인 내용들도 기정사실처럼 묘사되고 있어, 결의문의 권위와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 인민 전반에 걸쳐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식량권·생존권·평화권의 문제는 무척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식량 지원과 관련 분배의 투명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시급한 인도적 지원마저도 도의시하는 결과를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우리는, 세계식량계획(WFP)이나 유니세프(UNICEF)가 최근 보고서에서 북의 식량 분배의 투명성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다른 한편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식량 부족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대량의 인도적 지원을 호소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이번 결의안을 주도한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의 윤리적 정당성의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이들 국가들은 이라크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의 가해자이거나 방조자였고, 수십 년 동안 체계적인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는 대이스라엘 인권결의안에 반대하거나 기권하였다. 그리고 정작 미국 등은 가입하지 않은 국제인권조약을 북에게 비준 혹은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이중성은 가히 놀랍다.

이러한 불공정한 잣대와 태도는 북 인권 개선 요구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는 의심심을 가일층 확대시킬 뿐이며, 대북 인권 결의안의 진의가 의심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북 인권 문제가 발생하게 된 배경과 원인을 따져보더라도,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할 국가들이 남을 향해 손가락질만 하고 있는 지금의 형국에 비애마저 느껴진다. 한 나라의